

## ‘대불산단 전봇대’ 15년 지나도 못 뽑았다

MB “불합리 규제의 대명사”  
대로변 구간 255개 우선 제거  
2010년 국비 지원 중단에  
안쪽 180개는 그대로 남아  
조선업 물류 가로막는 ‘대못’  
노후 산단 개조 속도 높여야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마디로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가 돼버린 ‘영암 대불산단 전봇대’가 15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 소요 예산에 대한 지원, 미래 예측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변 구간 255개만 우선 제거했으나 안쪽 전봇대 180개는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열악한 재정의 영암군이 떠맡으면서 유아무야 되는 분위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전봇대 뽑기’는 10년 넘도록 진행형이다. 15년 전인 2008년 1월 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꼽혀온 대불산단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당시 전남도와 영암군은 2015년까지 산단 내 대로변 등 29개 구간 255개소(19.35km)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를 뽑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남아있는 전봇대 뽑기에 나서 내년부터 2년 간 국비 등 225억원을 투입해 영암군과 함께 대불산단 내 5.07km 구간의 전봇대 180개를 뽑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벌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현장을 찾아 고압선 단전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노후화된 대불산단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대불산단 전봇대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우선, 15년 가까이 전봇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는 국가산단임에도 요란했던 정부의 ‘반쪽’ 관심이 사라지면서 예산 지원이 중단됐고, 이후 지자체로서는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점이 꼽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뤄졌던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2년 뒤인 2010년부터 끊겼다.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전봇대 뽑는 사업을 추진하기 버거웠다. 2008년 21억원에 달했던 지중화 사업비가 2010년 5억원 수준으로 떨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 2천만 명 넘어 3일 코로나 19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이 넘었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현황판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 이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른 현안 사업을 포기하면서 웬만한 산단 조성 비용과 맞먹는 돈을 전력선 지중화를 위해 투입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반쪽 관심이 사라지면서 슬며시 다른 입장을 냈다. 한전측이 2009년 7월부터 ‘전력선 지중화를 원하는 사업체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국내 조선업은 지난 2007년 정점에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물동량 감소, 해운업 불황, 선박 발주 감소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었다.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 회사 입구의 전봇대를 뽑아달라며 비용 일부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을 리 만무했다.

대불산단을 조선산업 클러스터 단지(2004년)로 지정하면서도 애초 자동차·기계 산단 중심으로 조성했던 기반시설을 조선 산단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속도를 높이지 못했던 점도 한몫을 했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발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슈퍼사이클’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 발주 선박들의 대형화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 구조물(최대 32m)보다 훨씬 낮은 전봇대에 걸린 전선(8-12m) 때문에 전선을 우회하거나 절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일

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력선을 지중화하더라도 가로등과 신호등 등을 모두 없앨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운송로를 일원화하는 등 산단을 대형 조선업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게 절실한 형편이다.

그나마 전남도와 산업자원부 등이 뒤늦게나마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를 통해 대불산단을 주

축으로 친환경 조성 및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세계적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 핵심 산업인 조선 및 해상풍력이 재도약하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중 ‘대만포위’ 훈련에 항공기 100여편 운항 차질 우려

4일 정오~7일 정오 3일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 100여편의 운항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국적 항공기 100여편의 운항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정한 비행금지구역 유효 시간은 4일 정오(현지시간)부터 7일 정오까지로, 아직은 항

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6개 해·공역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며 항공기와 선박은 훈련 기간 해당 해·공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전날 통지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날 새벽 항행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상 운송의 경우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만으로 가는 해운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며 대체 항로도 멀리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아직까지 물류 애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안 흑산면 고수은 주의보  
서남해 양식어가 피해 우려  
합평·고흥·여수 앞바다로 확대

해양수산부가 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역에 고수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서남해안 일대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주의보가 발령된 흑산도 해역의 수온은 오후 1시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도에 도달했다. 현재 남쪽 바다의 고온 표층수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서 오후 2시에는 충남 천수만과 제주도 해역의 고수은 주의보를 심각 단계인 ‘경보’로 상향했다.

이로써 전남 합평만·도암만·득량만·여지만·기막만에 이어 충남 천수만·제주도 해역까지 고수은 경보가 확대됐다.

고수은 경보는 28도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합동 조사와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수은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양식장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 공급기나 액화 산소 등 대응 장비를 이용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고수은 특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됐고 폭염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수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다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누리집과 수온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심상철은 코로나 광주·전남 하루 7000명대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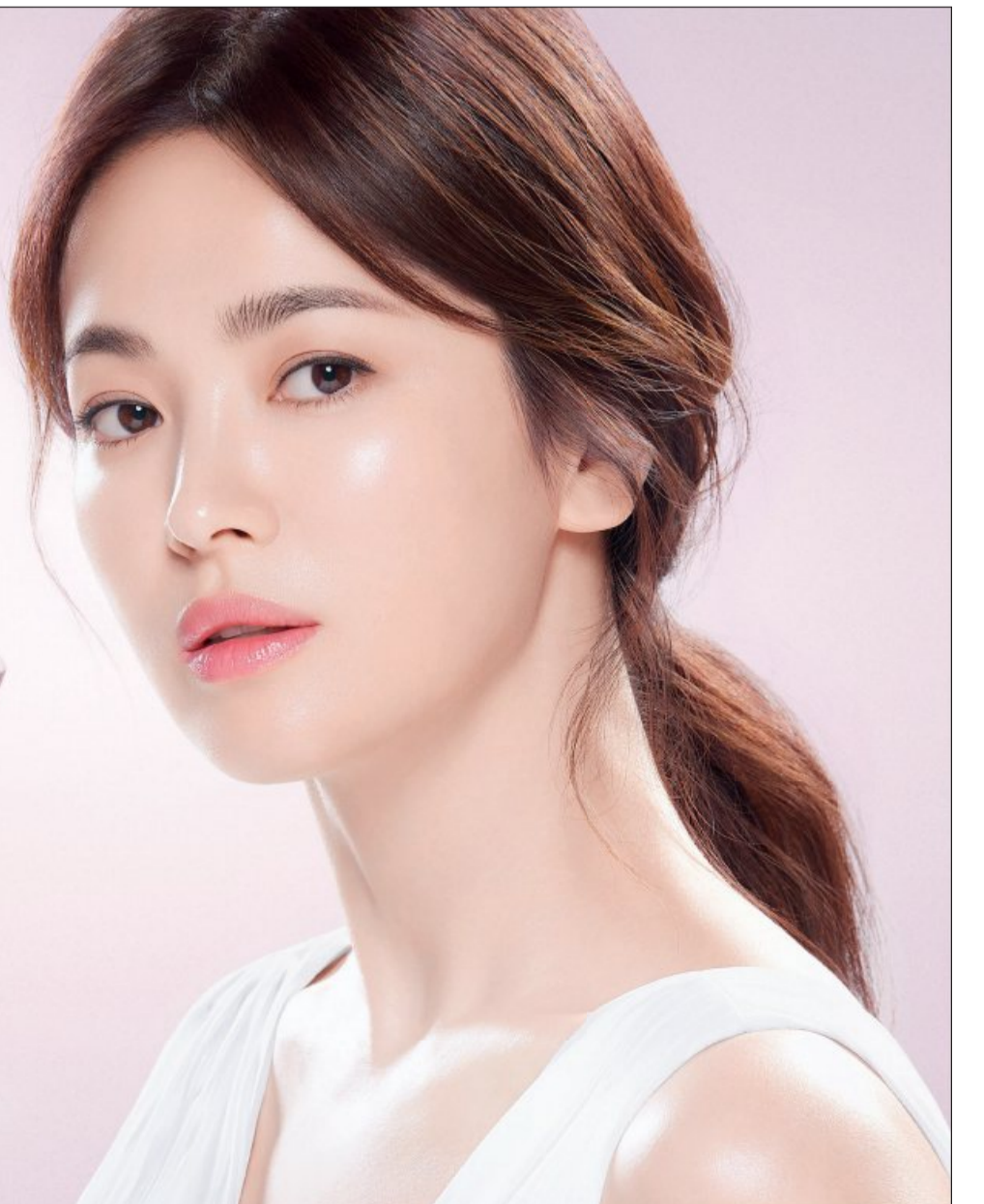
이사회·학교측 충돌…도 시끄러운 조선대 ▶6면

치솟는 금리 속터지는 주택 정책금융상품 ▶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